

##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 등, 3.31) >

- ◆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활성화라니? ... 피해자들 반발
  - “지원해주면 돈 쓴다는 건가” ... “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”

-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(3.29.)를 통해 확정된 내수활성화 대책에서는 관광·지역 골목상권·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내수활성화 방안과 함께,
  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, 청년 등 임차인 지원방안, 공공임대 확대,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강화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의 경우 경공매 등의 과정에서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,
  - 그간의 피해자, 전문가 간담회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것입니다.
- 향후 정부는 기발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면서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이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장원 (044-201-3321)
	주택임차인보호과	담당자	사무관	문수빈 (044-201-4421)